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1. 6. 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6월 9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이 승 헌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김 근 익 위 원 대행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1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1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1년도 제10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11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는 既송부한 자료로 보고에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93호 『토스뱅크(주) 은행업 인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 토스뱅크(주)에 대해 제3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 은행업 본인가를 하는 내용

- (위원) 인터넷은행이 처음 출발할 때 인터넷은행이 나오면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했음. 그런데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는 여기 표에도

있는 것처럼 기대를 저버린 것 같음.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10.2%, 케이뱅크는 21.4%로 해서 국내 일반은행 비중인 24.2% 보다 더 낮은 비중을 보여주었는데 이번에 나온 토스뱅크(주)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계획을 보면 2021년에 34.9%로 아주 높음. 그리고 2025년까지 48.9%로 확대하겠다고 하니 아주 반가운 소식임. 그런데 하도 의욕적으로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 확대 계획을 세우다보니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함. 그리고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거의 50% 수준까지 대출을 하다보면 건전성의 문제는 없을지, 그 부분이 걱정됨.

- (보고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인터넷은행에 비해서 토스뱅크(주)의 경우에는 예비인가 당시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쪽에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을 많이 했었고, 5월의 예비인가와 본인가 심사 과정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역량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음. 그래서 토스뱅크(주)의 경우에는 기존에 약 1800만 명 정도의 토스 이용자들에게 대한 여러 가지 금융생활정보라든지, 다른 대안정보들을 가지고 있음. 그래서 그 대안정보를 충분히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음. 그다음에 두 번째, 토스의 경우 최근에 저축은행 등을 통해서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했었음. 그래서 그 대출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기존의 중금리 대출에 대한 테스트 경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러면 실제 이 부분이 현실성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결국은 시장에서의 경쟁일 텐데 주로 금리 5%~10% 내외 정도의 4~6등급 정도의 고객들을 타겟팅(targeting)한다고 함. 그래서 그쪽을 타겟팅(targeting)했을 때 경쟁이 되는 회사들이 일부 카드사, 일부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쪽의 회사들이 될 텐데 지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음. 일단, 첫 번째로 제2금융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신용도에 대한 신용위험 외에 여러 가지 모집비용이 많이 듦. 모집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경쟁력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상대적으로 유리함. 고금리 대출의 경우 심지어 일반은행보다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경쟁력 측면에서 실제 중·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험의 옥석가리기를 잘 한다면 충분히 금리경쟁력이 있다고 봄. 지금 하고자 하는 중·저신용자 대출은 한 1,600억 원부터 해서 1.7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임. 그래서 1.7조 원 정도의 규모라면 지금 전체 금융권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음. 신용등급 4~6등급 기준으로, 그래서 100조 원 중에서 1.7조 원의 비중이 아주 큰 것은 아님.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 규모에 비추어서 금리경쟁력 그리고 신규 신용평가모형을 어느 정도 잘 운영한다면 충분히 현실성 있다고 보는 것임. 그다음에 건전성 측면에서 지나치게 신용평가를 하지 않고 대출을 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연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 그래서 지금 개발한 신용평가모형이 실제 잘 작동하는 것이 관건임. 만약에 신용평가모형이 잘 작동을 안 해서 초기 연체가 올라간다고 하면 신용평가모형을 조정하면서 건전성 관리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 영업개시가 된 이후에 실제 신용평가모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건전성 관리도 잘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이 계속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확대가 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살펴볼 계획임.

- (위원) 중·저신용자 대출도 많이 해야 되고 건전성도 유지해야 돼서 쉽지 않은 일인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상충될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잘 진행되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음.
- (위원) 수익모델이라든가 중·저신용자 대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더불어 운용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음. 새로운 은행이 출범을 했고 이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가 성공적으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선례가 있어서 잘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까마는 운용리스크, 특히 결제 쪽에서는 중대할 수 있음. 바로 당일 날 결제가 안 되어 지연된다든가 하면 은행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카카오뱅크 초기 출범 때에 상당한 혼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려가 됨. 전산시스템 점검이라든가 소액망이라든가 거액망 참가 이런 준비는 잘되고 있지만 점검이 안 된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림.
- (보고자) 다음 달에 또 한 차례 전산점검을 위한 실질점검을 나갈 예정이며, 실질점검을 나가서도 확인할 것임. 나중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테스트 하는 작업이 또 있음. 그래서 그 테스트 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기존의 카카오뱅크나 여타 인터넷전문은행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음.
- (위원) 부대조건이라는 것이 검토하면서 생겼다는 것인데,

예비인가 되었던 것에 비해서 본인가 하다보니까 영업이 생각보다 안 되어서, 1대주주가 계획도 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서 부대조건을 달은 것은 잘 했다고 생각함. 그런데 궁금한 것은, 부대조건을 달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부대조건들이 이행되는지 우리가 감독이나 집행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는지?

- (보고자) 심사 과정에서 토스가 대주주인데 토스의 현금흐름이 너무 약해서 결국에는 토스가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음. 토스가 대주주로 증자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유는 다릅니다마는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 증자가 중대한 측면이었음.营业을 개시하게 되면 영업 개시 이후에 전반적인 증자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함. 또 증자가 안 되게 되면 자산증가를 못하게 됨. 다시 말해 BIS비율이 계속 떨어지게 됨. 증자가 안 되어 자산이 줄고 대출이 계속 늘게 되면, BIS비율 수치만 확인하더라도 증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감원에서 잘 모니터링해서 증자계획도 사전에 확인하고 증자가 만약 차질이 생기거나 안 되었을 때 이렇게 부대조건을 걸음으로 인해서 토스를 포함한 주주들이 조금 더 열심히, 성실히 이 증자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94호 『(주)빅밸류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 심사안』, 제195호 『(주)공감랩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 심사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1년도 제5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비스로, 서비스의 지정기간(1년 연장)을 2년으로 추가 연장하는 내용

- (위원) 아마 (주)빅밸류는 은행과의 거래도 있었지만 감정평가 협회하고도 법정다툼이 있어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감정평가협회와의 법정다툼은 1심에서 (주)빅밸류가 이긴 것 같음. 그런 법률리스크가 없어지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 그리고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세칙도 바뀌야 되는 것 아닌지? 다 일일이 바꿀 수 없지만 4가지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국감정원 평가금액은 3가지 밖에 없어서,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것임.

- (보고자)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에 고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위원)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총리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법제처에서 부처별
일괄개정안을 제공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7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98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클라우드펀딩의 프로젝트 투자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

○ (위원) 이번에는 규정이고 모법은 국회에서 심의중이라고 했
는데, 그러면 모법이 바뀌지 않는데 규정을 먼저 바뀌도 되
는 것인지?

○ (보고자) 법률에 위임이 없는 사항만 따로 시행령 감독규정
으로 먼저 나갔음. 법률이 개정되면 그에 따른 시행령 감독
규정개정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개정은 법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법률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먼저

추진하는 것임.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99호 『키움증권(주)의 (주)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코람코자산신탁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된 키움증권(주)이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0호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케이디비인프라자산운용(주)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재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

○ (참여자) 동 안건과 관련하여 증선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음. 금감원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증선위가 3차례 개최되었다고 했는데 증선위 본회의를 포함해서

사전간담회까지 전부 5~6차례 정도 논의를 할 정도로 증선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를 했음.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감독당국에서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적근거가 사전적으로 명확하게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해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지침으로 통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데 이러한 판단에 비추어볼 때 이 건과 해서는 지적을 할 당시에 총액인수수 수수료와 관련 어떤 명확한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한 해석이 없었다고 판단을 했음. 그래서 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회계기준원의 명확한 해석을 받도록 지시했음. 그리고 그 지시에 따라서 회계기준원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총액인수수 수수료는 이연처리가 아니라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감원의 의견과 동일한 판단을 하였음. 다만, 이것은 해당 지적사항이 있고 증선위 심의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침익적 행정처분이 사전적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했음. 그다음에 자산운용업계에서 이러한 총액인수수 수수료의 즉시적인 비용처리가 완전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을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 회계처리와 관련한 팩트들을 확인했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선위에서 많이 고민을 했음. 아울러서 업체 간의 형평성을 감안하였음. 여기는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제재를 당하고 다른 업체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지적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도 제재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형평성 측면에서 감안을 하였음. 또 금감원에서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라는 지적된 7개 펀드가 설정일 이후에 투자자 변동이 없었으므로 해당 행위가 투자자 손익 간에 미

치는 영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감안했음. 그래서 증선위는 사안에 대해서 금번에는 시정조치를 통해서 계도를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원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게 나온 만큼 향후 조치대상 7개 펀드의 관련 회계처리를 금융위 의결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즉시 비용처리로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심의했음.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 동일한 사안이 존재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금감원에서 지도를 해 나가기로 얘기를 했음. 이상 증선위에서 논의된 전반적인 개요임.

- (위원) 증선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결론지어진 전체적인 처리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다만, 그 내용의 법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또는 문구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예를 들어 유권해석, 아마 회계기준원의 해석을 유권해석이라는 성격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것을 소급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일반론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음. 사안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있는 경우에 유권해석이 소급적용 안 되는 경우이고, 즉 여기에 있어서 보면 가장 주요한 논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위법성의 착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회계기준원의 해석은 나중에 다른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논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명확하지 않고 특히 문장 중에서 회계기준원 해석을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사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하나의 원칙대로 될 가능성이 있음. 어느 것이든지 유권해석에 나왔으면 그전의 것은 못

한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취지로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설명이나 표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곤란하다고 하는 것, 처음에 증선위에서 설명할 때 그럴 듯하다고 느꼈으나, ‘원칙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소급적용 하는 것은 나중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법률가적인 측면에서 정리해줄 수 있는지?
- (참여자) 증선위에서 의결되었을 때의 그 의미는 이 업체에서 이런 회계처리를 할 당시에 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없었으므로 현재 나온 회계기준원의 의견을 그때 있었던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임. 그러니까 그때 해석이 없었으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의미로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나온 회계처리기준을 완전히 변경해서 과거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를 조금 다듬을 필요성도 있어 보이지만 전체적인 것은 그때 당시에 회계처리기준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었음.
- (위원) 조금 애매하긴 한데, 회계기준원의 해석이 그때 없었다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함.
- (위원) 회계기준원 해석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증권선물

위원회에 권한을 주고 있음.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회계기준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위탁이 되어 있음. 지금 현재 모든 기업회계기준, 금융기관도 기업이니까 그와 관련한 재·개정 권한과 그 기능은 오로지 회계기준원이 가지고 있음. 동 건과 관련해서 증선위에서 심의를 할 때 그러면 회계기준원에서 당시에 명확한 해석이 있었느냐를 보니 회계기준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심지어 증선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회계기준원은 대단히 오락가락하는 해석을 해왔었음. 그래서 증선위 의결사항으로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회계기준원에 지시를 했었고 그 지시에 따라서 새로운 해석이 나온 것임.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회계기준이 나온 것임. 새로운 회계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그러면 과거에 했던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역시 새로운 회계기준에 맞도록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정권고를 통해서 과거에 했던 것들도 맞춰나가도록 해달라는 것이 증선위의 결정사항이었음.

- (위원) 법을 집행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단어 같은 것이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문서를 바꿨으면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결정문을 바꿨으면 하는 것인지, 어느 쪽이신지?
- (위원) ‘< 수정심의 사유 >’ 부분에서 ‘공식적인 해석이 없었으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석 자체가 새로운 규범 창설적인 효과를 내는데 그 해석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는 사전에 발표가 없었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라고 그러면 저는 창설적 해석이라고 보고, 이러한 원칙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해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표현이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음. 이것이 자칫 다르게 보면 모든 회계기준원의 해석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음. 거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은 이런 것 같다. 그것을 위반하면 위법할 것 같다.” 이 2가지가 매치됐을 때 처벌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그것에 따라서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이 이것은 위법이 아니겠다고 하는 2가지가 합치되어 제재를 안 한 것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음. 여기 나온 것처럼 앞으로 회계기준원이 어떤 식으로 해석이 나오면 그것은 과거에는 적용을 안 한다는 식의 뉘앙스는 조금 모호할 것 같음.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것은 ‘공식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므로’ 그렇게 하고 ‘해석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 사람들이 이 부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적용하여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문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 정도의 인식이 대부분 있었기 때문에 문장상으로는 당장은 ‘공식적으로 명확한 해석이 없었으므로’ 정도만 고치고 그냥 넘어가도 전체를 많이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음.

- (위원) 앞으로 회계기준원이 해석을 다 할 수는 없는데 할 때마다 과거 것은 다 적용을 못하느냐는 취지이신 것 같음. 혹시 수정할 표현에 대해서나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여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공식적인 해석이 없었으므로’ 다음에 예를 들면 ‘업계에서 어느 것이 정확한 해석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하지만 금융감독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우리가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을 쫓아서 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어떤 회계처리나 일반적인 예금이라든지 금융투자상품 등 상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IFRS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금융업권법에 규정, 시행령, 세칙에까지 그 규정들이 전부 들어가 있음. 대표적으로 보험 같은 것이 그러함.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에 대해서, 국내 회계기준에 어느 정도 해석에 대한 재량이 부여된 것은 주로 펀드하고 신탁에 해당됨. 그래서 이번 건이 펀드하고 신탁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분명하지 못했고, 아울러서 국내 회계기준원이 어느 정도 해석에 재량이 있는 건에 대해서 드문 케이스가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이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음.
- (위원) 욕심을 내자면 방금 얘기하신 펀드, 신탁 부분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워딩이 같이 들어갔으면 더 좋을 것 같음.
- (위원) 증선위에서도 5번 넘게 고민하셨던 부분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하니, 우선 지금 이 문구를 고칠 수가 없으니까 금감원 실무자와 금융위 실무자가 모여서 문서가 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문서의 문구는 수정하도록

하고 의결은 증선위 수정안대로 의결하면 어떻겠는지?

○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람.

○ (위원) 참고로 그냥 사족(蛇足)인데 검사받지 않은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음. 잘 된 것은 형평성을 적용하지만 법적용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격언을 들은 바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바꾸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한 회계기준원의 공식적인 의견, 그리고 다른 자산운용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음. 금감원과 금융위 실무자는 오늘 회의 논의된 것을 기록에 남는 것들, 보고서는 바꾸시기 바람. 동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하겠음. 동 행위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 (7)을 적용하여, 본 건 의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조치대상 7개 펀드의 총액인수수수로 회계처리를 즉시 비용처리로 정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1호 『미래신용정보(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미래신용정보(주)가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먼저, 수임사실 통보에 대한 미래신용정보(주)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음. 미래신용정보(주)는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과 콜센터 업무 등을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임. 2020년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문검사를 수검 받은 결과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의한 수임사실 통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음. 그래서 이에 대한 저희 회사의 입장을 설명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출석하였음. 여기에서 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임. 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위임받은 채권추심업무를 착수하기 전 채권추심자에 대한 사항과 채무에 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음. 다만, 동법 제6조제2항과 제3항에서는 기한이익 또는 계속적 서비스 공급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의 통보를 유예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계속적 서비스 공급계약이 해지되면 그때 수임사실을 통보하도록 적시되어 있음. 그 이유는 기한이익이 계속 살아 있거나 계속적 서비스 공급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미납기반이 짧은 초단기 채권인데 초단기 미납채권의 수임사실 통보는 상대방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깨뜨리게 되고 채무자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초단기 채권 특성상 연체와 미납이, 상환과 연체가 반복되게 되는데 그럴 때 계속 동일인에게 반복적으로 수임사실을 통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됨. 그래서 동법 제6조제2항과 제3

항의 입법 취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음. 그런데 금감원의 지적사항에서는 법무부에서 입법취지를 이와 다르게 해석했고, 해석의 내용을 저희들이 읽어봤을 때, 저희 쪽에서도 질의를 하고 답을 받았는데 해석이 굉장히 자의적이거나 저희 회사의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경우도 상정해서 답변을 받았음. 특히,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기한이익을 상실한 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서비스 이용료 납부지체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된 법률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저희 쪽에 해석을 통보해 올 때는 이러이러한 통보는 불필요하다는 식의 해석을 해 왔었음. 이는 납득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임. 그래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내용은 미래신용정보(주)뿐만 아니라 모든 신용정보회사가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이를 해석하고 그것을 신용정보회사 업무에 적용하면 신용정보회사가 혼란을 겪게 되고 또 무엇보다 예견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수많은 채무자들이 생활의 지장을 받게 되고 심각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음. 끝으로 미래신용정보(주)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법률을 준수하면서 영업행위를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음. 수많은 초단기 미납채무자의 평안한 생활유지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의 의견을 잘 살펴보고선 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법무부에서 나온 유권해석이 서로 달랐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 (보고자) 법무부 유권해석이 다른 것은 아님. 법무부에서 총 3차례의 유권해석을 했음. 과거 SCI신용정보가 이와 유사한 건이 있어서 2018년 11월에 금감원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해서 받아서 수임사실 통보하는 것은,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통보하는 것은 결국 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일단 미납자인 경우에도 바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를 미리 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그렇기 때문에 미래신용정보(주)가 주장하는 수임사실을 먼저 통지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다음에 통보하는 사실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려줬는데 미래신용정보(주)에서도 과거의 유권해석은 금융감독원에서 요청한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회사 쪽에서도 한 번 더 받아 보겠다고 해서 2020년 11월에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음.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소관은 법무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 2018년 11월에 금감원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니까 올해 2월에 또 유권해석을 요청했음. 그것은 둘 다 미래신용정보(주)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그때도 또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 법률취지와 맞지 않는, 법무부에서 유권해석을 잘못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그 세 차례의 유권해석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미래신용정보(주)는 계속 주장하면서 오늘 금융위에서 의견진술을 하겠다고 진행이 되었던 것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2호 『(주)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케이비국민카드가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3호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간의 주요 정책사항을 반영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4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7월1일 출시 예정인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5호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 보험업 예비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의 보험업 예비허가를 승인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은 예비허가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본허가는 언제쯤 나오는 것인지?

○ (보고자) 원래 법규로는 예비허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 정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이 메기냐 아니면 포식자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진행되어야 알 것 같음. 그런데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토스뱅크(주)도 의결을 했음. 그러다 보니까 토스뱅크(주),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에 대한 P2P, 시장에서 관심 있는 것을 의결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3개가 보도가 나가서 분산해서 은행
 부문은 즉시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가칭)카카오손해
 보험(주)은 내일 석간썰에 보도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기사는 다 나갈 것임. 기사는 그렇
 게 나간다고 하더라도 공식적인 것은 내일 석간 쪽으로 분
 리해서, 은행과 손보를 분리해서 홍보 내지는 설명을 하려
 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지켜 줄 수 있으면 내일 오후까지
 지켜 주면 좋겠음. 그렇지 않아도 기자분들이 취재하거나
 아니면 카카오에서 흘러 나갈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것은
 내일 나간다는 것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6호 『(주)글로벌금융판매 보험대리점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영업검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험대리점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해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를, 보험설계사 양주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을 진술함

○ (진술인) (주)글로벌금융판매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인한 제재
 와 관련하여 회사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금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귀위원회의

청문기일에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글로벌금융판매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사실,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제공 또는 보험료를 대납한 사실,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자에게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영업정지 30일, 과태료 48억 4,840만 원을 부과 받았음. 우선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위반사항 위법부당비율이 1%넘어서 업무정지 30일을 건의하였으나 제재금융상 위법부당비율이 2%미만인 시에는 업무정지 30일 외에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도 가능함. 또한 제재규정상 소수 임원·보험설계사의 위법·부당행위로 다수 선량한 보험설계사의 실직 등 피해 정도가 과도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기관제재를 감경할 수 있는데 본 사안은 소수의 위반행위로 1만 여명의 설계사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적사항 중 작성계약과 관련하여 총 1만 여명의 설계사 중 25명이 관여되어 있고 784개 지점 중 23개 지점이 관여되어 있고, 부당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1만 여명 중 14명의 설계사와 관련되어 있고 784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관여되어 있음. 특별이익과 관련하여서는 약 1만 여명의 설계사 중 8명이 관여하였고, 784개 지점 중 5개 지점이 관여되었음. 이와 같이 극히 일부 설계사가 위반행위에 관여하였는바 이점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람. 업무정지 30일 제재 시 설계사 1인당 66만 7,000원의 추가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보험설계사 평균 소득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생명보험모집만 가능한 설계사 1,241명의 경우 소득이 거의 없게 됨. 이는 일반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직원의 소득이 감소되지 않는 것과 큰 차이임. 그리고 업무정지로

인한 평판 저하가 발생하여 보험설계사들이 이직할 가능성이 많고 이는 고객관리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업무정지 30일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보험연구원 자료에서도 뒷받침되고 있음. 2021년 1월20일 귀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는 ‘GA 영업정지 시 다수의 소속설계사의 생계 위협’을 받으므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도입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영업정지를 감경하여 선량한 다수의 보험설계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귀위원회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됨.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부당행위의 정도,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 바람. 첫째, 회사는 금융감독원 검사 전에 위반행위 적발 시마다 설계사들에 대하여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매출제한조치, 계약해지, 해촉 등의 선제적 조치를 진행하였음. 종전에 영업정지를 받은 리더스 보험대리점의 경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위반행위가 있었으나 본 사안의 경우 일부 소속설계사들이나 지점장들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함. 제재규정상 금융기관 또한 그 임직원에게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기관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람. 청문기일에 드린 장표에는 없으나, 과태료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음. 2개 이상의 동일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이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종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감경사유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상한으로 기능하였으나 본 사안에 대하여는 이러한 감경사유를 적용하지 않았음. 본 사안의 경우 일부 소속설계사들이나 지점장들의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한 바 영업정지로 중징계 결정을 하면서 과태료 감경을 배제한다는 것은 중복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과도하다고 사료됨. 결론적으로 약 50억 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회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달성되는 점, 회사는 위반행위 발견 시 지점폐쇄, 계약해지, 설계사 해촉, 형사고소 등의 선제적 조치를 완료하였으나 다시 과도한 제재를 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는 점, 회사는 보험사에 62억 원이나 넘는 수수료를 환수당하는 등 일부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이미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 1%도 되지 않은 설계사 등의 위반행위로 나머지 99%이상의 1만 여명 설계사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점, 업무정지로 인한 이직 등으로 고객 관리에 문제가 생겨 계약자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는 과도한 처사라고 생각되므로 제재감경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진술인께서 발표하신 자료를 보시면 ‘업무정지로 인한 평판저하가 이직으로 연결(고아계약 다수 발생)되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고객관리의 문제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음. 어떠한 문제하고 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인지?

- (진술인)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평판에 의해서 움직임. 그런데 만약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설계사들은 움직일 확률이 높음. 이직을 하면 모든 계약이 다른 GA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남아 있고 그렇게 되면 고아계약이 생기게 되고 고아계약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임.
-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 (진술인) 계약관리가 안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됨.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이 보험청구나 보험금 또는 그 계약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임.
- (위원) 지금 기관조치가 영업정지 30일과 과태료 48억 원임. 아마 주장하는 바는 과태료도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것 같음. 금융위 업무계획서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업무정지 30일, 과태료 48억 원을 과태료 100억 원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지? 예를 들어 질문하는 것임.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니까 소비자 피해, 다른 설계사에 부담이 되니까 영업정지를 안 하고 과태료를 100억 원이나 150억 원으로 하면 합당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과다하니까 업무정지만 빼달라는 취지이신 것인지?

- (진술인) 업무정지를 감경해달라는 취지임. 과태료 50억 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진술인 측에서는 영업정지를 하면 설계사들이 움직여서 고아계약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 피해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보고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셔서 내용을 확인해보았음. 설계사가 이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계약을 이전함. 그래서 (주)글로벌금융판매의 한 큰 조직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대리점에서도 계약을 그쪽 대리점으로 이관해줌. 단지 이관하는 과정에서 설계사가 지정이 안 되는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있어도 결국은 설계사가 다 지정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음.
- (위원) 어차피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이고 당연히 보험계약에 따르는 모든 보호는 최종적으로 보험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지? 중간에 보험설계사들이 개입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절차상의 불편함이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는 가능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말씀하신 대로 보험회사가 그런 계약관리를 해야 되고, 적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보험회사가 노력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실무자들께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나 불편함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조치를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것이냐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걱정을 하신 것이고, 충분히 제기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함. 우선 금감원에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전혀 불편이 없지는 않을 것임. 어쨌든 실수를 했지만 진술인 주장대로 다른 보험설계사들은 30일간 영업을 못하면 똑같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사안임. 그렇다면 영업정지 30일을 빼줄 테니까 영업정지 30일 등가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면 처벌의 목적은 달성하면서 소비자 피해 문제라든지 다른 설계사의 피해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불가능한지?
- (보고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런데 영업정지를 하는 대신 금융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것처럼 처벌적 과징금을 부여하면 아마도 그 금액은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고, 과연 보험대리점 입장에서 영업정지를 받는 것과 큰 규모의 과징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라고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하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

함. 어떤 대리점은 이쪽을 선택하고 어떤 대리점은 다른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 (위원) 여기가 한 대리점이 아니라 연합대리점인지?
- (보고자) 그러함. 지사형으로 해서 여러 대리점이 합쳐진 형태임. 개체 자체는 하나임.
-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담으로 대한민국에 철강이 부족함. 건설업이 호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철강이 부족한데,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연히 1/4분기 철강업체에서 사고가 많이 났음. 뉴스보아서 알겠지만, 철강업체에서 생명사고가 나면 자동적으로 가서 노동부에서 확실히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함. 포항제철이라든지 이런 곳이 공장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생산량이 부족한데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니까 철강부족이 더 커지는 것임. 이것은 꼭 철강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꽤 널티적인 성격에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꼭 공장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능사인가, 아니면 회사가 감당하게 생명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만큼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시켜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비유가 다를지 모르겠음. 저렇게 진술인이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영업정지는 안 하겠지만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할 만큼 끔찍할 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적으로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즉흥적으로 진술인의 진술을 듣다가 얘기했던 것인데, 제가 갑자기 여기에서 영업정지를 바꾸자고 할 수는 없고 꼭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님. 다른 위원님들은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 (위원) 한 가지만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안전 검토소위원회 과정에서 받은 내용 중에 ‘보험대리점의 제재 실효성 재고 방안 보고’라고 해서 2019년도에 보험대리점 제재 문제를 다룰 때 그중 하나의 주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지금 의견진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2%이하일 때 업무정지 30일 또는 경고·주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부과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서 이것이 2%가 있고 1%미만도 있고 2개가 차이가 있는데, 진술인 같은 주장이 나올 수가 있으니 앞으로는 1% 이상은 업무정지 30일로 하고 1%미만은 경고주의로 한다는 내용으로 양정기준을 세분화하겠다고 했었음. 그런데 그 이후로 시행세칙이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둘 중에 더 간편한 경고·주의 쪽으로 주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쭙보고 싶음.
- (보고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했는데 법제처에서 규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봤을 때 그 정도까지 할 것은 아닌 것으로, 결국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시행세칙 개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영업정지 대신 등가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낮지 않느냐는 의견에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맞을 것 같음. 다만, 지금 현재 과태료 산정방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 않고 과징금은 결국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영업에서 얻는 이익과 불법으로 얻는 손실을 상계할 테니까 얻어지는 이익을 박탈한다는 의미의 과징금 제도를 만들고 그 설계를 상당히 만든다면 오히려 설계사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안 주고 효율적인 제재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현행 과태료 규정상은 대부분 과태료가 상한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보고자) 지금 보험모집채널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어서 대응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있음. 이런 유니온식 지사들이 모여서 만든 유니온 대형 GA 대리점에 있어서 내부통제라든지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준, 그리고 아까 진술인 PPT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라고 해서 그 부분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그래서 하반기에 가능한 속도를 내서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기준을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음.
- (위원) 과징금을 도입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지?
- (보고자) 법령 개정 사항임. 그런데 이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이 이미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이미 도입되어 있음. 다만 그쪽은 월급을 받는 고용된 형태이고 이쪽은 설계사 쪽이어서 그런

과징금의 효과라든지 설계사의 수입 부분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됨.

○ (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법령개정을 하고, 소비자 피해 부분은 영업정지 30일에 원래 과태료대로 해도, 이런 부분을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겠는지?

○ (보고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아계약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일시적인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 부분까지도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음.

○ (위원) 다 좋을 수는 없음. 징계도 하면서 피해도 없을 수는 없을 것임. 징계를 할 때는 항상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약 징계를 하면서 피해를 안 보려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소비자를 인질로 삼고 징계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임.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7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투자시장의 최신 흐름 반영 및 기업의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08호 『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일부 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축약제도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 장외 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9호 『한국거래소 검사실시 계획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계획안으로, 거래소의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

- (위원) 8월에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는데, 금감원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6월에 의결하는 것 아니겠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안건은 비공개인지?
- (보고자) 안건 자체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에 대해 검사를 하겠다고 금융위에서 의결한 것인지 대외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겠음.
- (위원) 한국거래소를 왜 검사 안 했느냐는 국회의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 금감원과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그렇게 하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0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회계기준원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함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

- (위원) 부채 부분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꾼다는 것이 처음 나온 것인지?
- (보고자) 지난 20여 년 동안 보험 관련된 기준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음. 이는 오랫동안 실무와 같이 논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보험회사들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 (참여자) 증선위, 안건검토소위를 통해서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지금 시행되는 측면, 이런 모든 것들을 폭넓게 논의를 했음. 현재까지 보험업계하고 충분히 논의해 왔고,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이 회계처리나 재무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
- (위원) 지금부터 미리 잘 준비하기 바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1호 『(주)○○○○○○ 등 3개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주)○○○○○○ 등 3개사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 등록하는 최초의 3개 사업. 그동안 관심도 많았고 언론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온투업 등록을 받아주는 것이냐 안 받아주는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었는데 드디어 3개사가 나가고 계속 이어서 할 것임. 이것도 아마 언론의 관심이 많아서 토스은행(주)은 아마 자기들이 바로 공개했을 것이고 (가칭)카카오손해보험(주)과 이 P2P 3개사는 내일 오후로 분리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음. 그리고 아마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계속 들어올 텐데 금감원에서 잘 가려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2호 『금융권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 운영 실무지침(안)』를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5.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실제 심사중단·재개여부 검토 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및 요건을 규정한 실무지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금융위원회 제1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6시 30분 폐회)